

건강 칼럼

2024년도 건강검진, 놓쳤다면 2025년 상반기까지 연장 신청 필요해

우리나라는 주요 만성질환과 암 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해 국가 암검진 및 건강검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건강검진은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와 만 19세 이상 만 64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짝수 해에는 홀수년도 출생자, 홀수 해에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2년에 1번 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으나 비사무직 근로자라면 매년 받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 건강검진은 신체 측정, 시력 및 청력 검사, 혈압, 소변 검사, 흉부 엑스레이 촬영, 구강검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항목은 비만,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을 초기에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별, 연령대에 따라 우울증, 생활 습관 평가, 골밀도 검사와 인지기능장애 검사, 노인

신체기능 검사 등을 추가로 진행한다.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주요 암 질환에 대한 검진도 진행한다. 20세 이상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사를 2년에 1회 받을 수 있으며, 40세 이상 여성은 유방촬영술을 통해 유방암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간암, 폐암 등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검진을 진행한다. 40세 이상 남녀는 위내시경 검사를, 50세 이상 남녀는 분변잠혈검사를 통해 대장암 검진을 받게 된다.

국가건강검진은 기본적으로 무료이거나 일부 본인 부담금만 발생한다. 다만 국민의 평균적인 건강 수준을 고려해 검사 항목을 정해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을 100% 반영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건강검진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싶다면 자신에게 필요한 항목을 적절히 추가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요즘에는 20~30대 젊은 나이에도 암 질환, 만성질환에 걸리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에 특정 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다면 국가건강검진 대상 연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한편, 직장인 건강검진의 경우, 제때 받지 않고 넘어가면 사업주와 당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2024년 검진 대상자라면 더 늦기 전에 반드시 건강검진을 예약, 진행해야 한다.

만일 2024년이 지나도록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2025년도 초 건강검진 연장 신청을 통해 건강검진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개인이라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는 회사에 요청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2024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중 미수검자는 2025년도 상반기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놓치지 말고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조진경

송도동 송도조앤내과의원 원장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캘리포니아 산불 관련 발언하는 바이든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 소방서를 방문해 산불 관련 상황 보고를 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캘리포니아주를 대규모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연방 차원의 복구 지원을 명령했다.

핀란드 외무장관과 악수하는 젤렌스키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왼쪽)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엘리나 발토넨 핀란드 외무장관과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설

새해 정치지형 요동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새해 정치권 지형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하는 국민의힘은 다시 비대위 체제에 돌입했고,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하는 민주당은 외연 넓히기에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8년 만에 또다시 대통령 탄핵 정국에 내몰렸다. 탄핵 찬성을 주창했던 한동훈 전 대표는 결국 취임 다섯 달 만에 쫓겨나듯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 비대위가 출범했다. 사보오열된 당을 새롭게 이끌 비대위 원장은 5선의 권영세 의원이자, 계엄 사태와 탄핵안 가결로 위기에 몰린 보수진영과 당을 재건해야 한다는 막중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까지 관리해야 하는 권 비대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반성의 목소리를 내며, 싸늘한 민

심을 되돌리기 위한 첫발을 뒀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의 주도권을 쥔 민주당은 수권정당 이미지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조기 대선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직접적인 선거 언급은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국정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사실상 대선 준비에 나섰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된 상비개정안 처리에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도 중도·외연 확장 계획의 연장선상이란 평가다.

민주당으로서의 시간이 문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시작된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성사되더라도 언제로 잡히느냐가 큰 변수일 수 있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비명계 3김'이라 불리는 이튼바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역시 보폭을 넓힐 전망이다.

대통령 영장에 적힌 예외조항

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에는 경호처의 반발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한 예외 조항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이 지난해 12월 31일 발부한 수색영장에는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그동안 대통령경호처는 군사보안시설인 관저에 대한 영장 집행에 강력 반발하며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을 압수수색 제한 사유로 규정한 해당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영장은 이런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이 같은 문구를 적시한 건, 이번에 발부한 영장이 통상의 압수수색영장과는 다른 위치이기 때문이다.

해당 영장은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체포에 불응하며 관저 안에 서 나오지 않을 경우 그의 소

재를 파악하기 위한 영장이다. 경호처가 내세운 군사보안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아설 수 없다는 것이다. 애초에 군사보안시설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문구가 영장에 적히는 것도 이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대머 체포에 불응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경호처 측이 해당 조항에 근거해 체포를 막아선다면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영장에 이 같은 반발을 원천 차단하는 문구가 명시된 만큼 영장 집행을 막아선 경호처의 방어 논리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공수처장도 “관저에 바리케이트나 철문 등을 잠그고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